

광주·전남 2차 공공기관 이전 ‘원팀’ 총력대응

정부 2차 이전 본격화...시·도 4자 협의체 가동 희망기관 교통정리

국토부 157곳 이전 용역 마무리 단계...특별광역연합 필요성 부각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본격화를 계기로 시·도는 최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혁신도시 시즌 2’를 겨냥해 10월부터 TF를 가동해 정부 동향을 공유하고 AI·그린에너지·미래차·문화복지 등 전략 산업과 연관된 유치 후보기관 발굴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AI 관련 기관이 지역 산업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맞춤형 설득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7월부터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이전 후보기관을 분석하고 유치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농협·수협중앙회, 한국공항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을 2차 이전 유치 목표로 선정했다.

김영록 지사는 “앞으로도 해당 기관들을 직접 찾아 건의·설득을 이어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시·도는 기관 유치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꾸렸다.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양 시·도의 싱크탱크인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등 4개 기관은 ‘4자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시·도는 개별 유치전을 벌이면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공유하며, 유치 희망 기관의 교통정리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연말까지 구체적인 이전 대상이나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내년 이후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입지를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나

주 빛가람 혁신도시)’라는 성과를 일궈낸 경험이 있다.

광주의 양보로 전남에 혁신도시를 조성했고, 한전 등 굵직한 공기업 유치를 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시즌 2’에서 두 지자체가 힘을 합쳐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굳건하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5극 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전략과도 맞물려 있어 무엇보다 협력체계가 절실하다.

광주·전남은 이 구상에서 호남권 남서부 공동성장 거점으로 묶여 있고,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독자 발전을 추진하는 만큼 두 시도의 결속이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전국 최초 초광역 행정협의체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이 도의회의 의결지연으로 차질을 빚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특별연합은 양 시도의 주요 공동사업을 통합 추진할 새 거버넌스다. 출범하면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광주·전남 광역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와 공조해 추진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가 용역을 발주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윤곽은 애초 10월 말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자체간 경쟁 과열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157곳을 대상으로 2차 이전 대상 선정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대상 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연내 조사를 마치고 2026년 계획 수립, 2027년 선도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불빛한 5·18민주광장 성탄트리

지난 30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대형 성탄트리의 점등을 시작으로 ‘빛고을성탄문화축제’가 개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쿠팡 고객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5개월간 몰랐다

중국 국적 전 직원 소행 추정

정부 민관합동조사·경찰 수사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400만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불안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9면〉
특히 유출 경로가 외부 해킹이 아닌 이미 출국한 중국 국적의 내부 직원으로 추정되면서 수사 난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9일 오후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 정보는 이름·전화번호·이메일·주소·일부 주문 정보 등이 포함되며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무

단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으며 관련 사실을 지난 18일 인지 후 20일,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현재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지난 25일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쿠팡은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

쿠팡의 피해 규모 축소와 늑장 대응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쿠팡은 지난 20일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이 4500여개라고 발표하다가 9일 만에 3370만개로 정정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피해 고객에게 발송한 문자 안내도 고객별로 시간 차가 커 불만이 제기됐다.

소비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하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모임’을 개설해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

이번 유출 규모는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3500만명) 해킹 사례와 비슷하며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2324만명)을 넘어선다. 앞서 롯데카드, KT 등에서도 초기 축소 발표 후 피해 범위가 확대된 전례가 있어 추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올해 6월 24일 시작된 쿠팡의 최근 사고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현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5년 이상 합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을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의정부지법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대해 제정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6~7세 아동의 이미에 입

을 맞춘 A씨와 엘리베이터에서 7세 여아의 손을 쓰다듬은 B씨의 각각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한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제정을 했다.

하지만 현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어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고,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도 부족하다”며 보호법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OK! Now Jeonnam

전라남도

전남관광플랫폼

JN TOUR

신규

회원가입 이벤트